



국토교통부

보도자료

배포일시

2021. 5. 18(火) / 총5매(본문5)
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장우철, 사무관 이중곤 ·☎ (044) 201-3317, 3325
담당부서	서울시 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김정호, 팀장 강준령 ·☎ (02) 2133-7010, 7012
담당부서	경기도 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염준호, 팀장 김성범 ·☎ (031) 8008-3460, 4926
담당부서	부산시 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김철홍, 팀장 강관구 ·☎ (051) 888-3520, 3523
담당부서	대구시 건축주택과	담당자	·과장 김용술, 팀장 최삼룡 ·☎ (053) 803-4600, 4610
담당부서	인천시 건축계획과	담당자	·과장 심재정, 사무관 방용섭 ·☎ (032) 440-4756, 4757
담당부서	광주시 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정현운, 사무관 박기병 ·☎ (062) 613-4270, 4820
담당부서	대전시 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이효석, 팀장 박종문 ·☎ (042) 270-6350, 6370
담당부서	울산시 건축주택과	담당자	·과장 이재곤, 사무관 박승욱 ·☎ (052) 229-4410, 8360
담당부서	세종시 주택과	담당자	·과장 권봉기, 사무관 방성현 ·☎ (044) 300-5911, 5912
보도일시		5월18일(화요일) 14:00 이후 보도 가능	

노형욱 장관,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

- 후보지 9.8만호 확보, 2/30이상 동의 2곳 등 공급추진 상황 원활 -
- 현재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, 최대한 많은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 -

□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, 5월 18일(화) 9개 지자체, 4개 공기업,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(정부세종청사, 영상회의)를 개최하였다.

* 일시/장소: 5.18 10:30 / 정부세종청사 6동 5층(영상회의)

* 참석: 지자체(서울·경기·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 부단체장)
공공기관(한국주택토지공사·주택도시보증공사·서울주택도시공사·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)
민간협회(한국주택협회·대한주택건설협회·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)

□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) **지자체·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및 원활한 추진**

□ 3080+대책 추진현황과 관련, 국토교통부는 현재 통합지원센터(5.11)를 통해 약 1,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였고, 도심내에서만 총 491곳 (지자체 415곳, 민간 76곳), 약 10만호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되었으며,

○ 특히, 이중 중산4지구,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4월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2/3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임을 소개하였다.

□ 이와 관련, 지자체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에 기대감을 표시하며, 후보지 주민들이 대부분 장기간 공급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만큼, 공급정책에 대한 기대와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전했다.

○ 특히, 대구^①·부산^② 등 최근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이 입지여건이 우수함에도 저이용·노후화되어, 복합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·상업 거점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,

① (대구) 신청사 부지, 미군부대 반환지 등과 연계한 新주거지역 조성 및 지역거점기능 강화

② (부산) 정비구역 해제 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

- 입법절차 및 사업시행 등 예정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,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·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□ 한편, 한국주택협회·대한주택건설협회·부동산개발협회 등에서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.

○ 먼저,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므로, 사업절차·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
- 아울러,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·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.
-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,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·주민과 적극 협의하고, 민간업체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며,
 - 지자체에서도 추가 후보지 발굴 및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,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허가 절차·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 - 아울러, 노형욱 장관은 “지자체와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,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하는 한편,
 - “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, 관계부처·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,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”라고 답했다.

2) 2.4 대책 등 공급대책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마련

- 아울러,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·지자체·공급관련 기관 등이 도심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,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.
 - 특히, 주택 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,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.
-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“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,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”이라며,

- “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” 이라고 강조하였다.
- 다만,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·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,
 -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.
 - 특히,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,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.

3)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

- 마지막으로, 참석 기관들은 2.4 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,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토론하였다.
 - 이와 관련, 국토부는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중산4지구, 수색14지구 등을 포함하여, 주민동의율 10%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(현재 8곳, 1.4만호)와 공공재개발·재건축 후보지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,
 - LH공사 등의 컨설팅을 통하여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,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종곤 사무관(☎ 044-201-33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